

# 매년 소방·위생점검하고도... 불법 바비큐장 비호 의혹

### ■담양 펜션 부실점검인가, 알고도 눈감아줬나 건축물 대장 확인 필수...몰랐다는것 이해안돼 어설픈 업주 수사...사흘간 대면조사 전혀 없어

총체적인 부실 점검인가. 불법을 눈 감아준 겁쟁이 행정인가. 대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한 담양 펜션 화재와 관련, 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의 석연치 않은 행정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년 가까이 해마다 이뤄진 2차레 이상의 위생 점검과 3년간 진행된 소방 점검에도 무허가 시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관계 당국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펜션의 실질적 소유주로 지목된 최모(55) 광주시 북구의원 등을 상대로 한 경찰의 수사 과정도 지나치게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역세계 운 좋은(?) 펜션=17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 활동휴집펜션은 지난 2005년 이후 이뤄진 위생점검에서 단 한 차례도 바비큐장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담양군은 숙박시설 및 음식점 허가를 받은 해당 펜션에 대한 위생 점검을 매년 1~2차례씩 실시해왔다.

위생 점검 항목에 포함되는 숙박요금 표 게시 여부를 비롯, 객실·침구류·욕실 등 청결 상태를 파악하고 투숙객들에게 제공되는 식수의 적합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필수라는 게 관련 공무원들의 일반적 시각이다.

매년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 성수기나 나들이객이 많은 봄·가을철의 경우 정기적 점검이 이뤄질 밖에 없는 현실을 고

려하면 불법 시설 여부를 몰랐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소방당국의 점검 과정도 의혹이 제기된다.

소방점검의 경우 특성상 소방관이 건축물 대장을 보고 시설 연면적 등을 토대로 법정 소방 설비 구비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살피는 게 기본 업무다. 해당 펜션은 지난 2012년 8월과 지난해 7월 2차례 특별 소방점검을 받았지만 무허가 건축물 여부는 물론, 소방 설비에 관한 지적 사항도 없었다. 화기 취급 시설이 무허가로 운영되는데도, 두 차례나 걸쳐 '양호' 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통령 특별 지시까지 내려졌지만 6개월 이내 점검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존 점검 내용을 그대로 복인했다. 이 때문에 관련 기관의 점검 횟수 등을 고려하면 부실한 점검이 아닌, 봐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경찰, 문전 박대당하고 수사력 한계 드러내=담양경찰은 화재 사고 당일인 지난 15일 밤 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실질적 업주 최씨를 조사하기 위해 조선태병원을 찾았다가 경비원에 의해 제지당하고 병실로 들어가지 못했다.

경찰은 최씨가 "사생활을 지켜달라"며 신원 및 소재 노출을 제한해 줄 것을 병원 측에 요구하면서 병원 출입구에서 3시간 가량 서성거려다 돌아섰다. 수차례의 협조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양 펜션 화재로 4명이 숨진 가운데 17일 오후 경찰이 펜션을 압수수색한 뒤 영업 장비 등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경찰은 당시 "이런 경우는 수십 년(경찰 생활하면서)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면서 "영장을 준비하거나 출석요구서를 준비하는 등 최소한의 수사 서류라도 있었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어설픈 수사 방식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경찰은 16일 최초 브리핑을 한 자리에서 ▲불법건축물 여부 ▲실질적 소유자 조사 여부 등에 "수사중", "말할 수 없다"고만 했다. 경찰은 이 때까지도 10명의 사상자가 난 화재 현장 소유주에 대한 기초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건축물 대장 및 담양군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알맹이 없는 브리핑을 했

다", "무능한 수사력을 드러냈다"며 유가족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유병연 변호사 "영장을 준비하거나 출석요구서를 준비하는 등 최소한의 수사 서류라도 있었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6일 최초 브리핑을 한 자리에서 ▲불법건축물 여부 ▲실질적 소유자 조사 여부 등에 "수사중", "말할 수 없다"고만 했다. 경찰은 이 때까지도 10명의 사상자가 난 화재 현장 소유주에 대한 기초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건축물 대장 및 담양군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알맹이 없는 브리핑을 했

어떤 설명도,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최씨가 의사 소통과 외부 활동에는 무리가 없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날 오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싸는 듯한 행태를 보여 비판을 사고 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때 실질적 소유주가 현장에서 유족에게 사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과는 사뭇 비교되지는 지적도 나왔다.

조선태병원 측도 "환자가 강력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해 해당 환자에 관한 정보는 경찰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미친 아빠’

### 아내 부적절한 장소 출입 의심 10대 아들에 엄마 때려라 강요 아내 직장서 폭행...구속영장

부인이 '부적절한 장소'를 드나든 것으로 의심해 아들에게 엄마를 혼내주며 폭행을 강요한 비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대 아들은 아버지의 무서움과 강요에 못 이겨 끝내 허리띠로 자신의 엄마에게 손을 댔다.

A(43)씨는 지난 16일 새벽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15)에게 엄마(40)의 머리에 물을 뿌리라며 욕박질했다. 거실에서 들리는 큰 소리에 잠을 깨고 나왔던 아들은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에 머뭇거리지만 아버지가 시키는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더 나아가 아들에게 엄마를 때리라며 허리띠까지 건넸다. 아들은 가만히 서 있었다. 화난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이며 다그쳤고 아들은 아버지가 무서워 엄마 등을 때리는 시늉을 했다. A씨는 중간에 아들에게 허리띠를 빼앗아 자신이 부인을 폭행했다.

이날 사건은 A씨가 늦게 귀가한 부인의 지갑에서 '호스트바'로 의심되는 영수증을 발견하면서 비롯됐다.

A씨는 이날 아침 부인의 직장까지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고 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펜션 업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방침

담양경찰은 불법 건축물에서 일어난 화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활동휴집펜션 업주 최모(55)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해당 펜션의 관리동과 업주 최씨 부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펜션을 관리한 업주 부부와 아들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로 참사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펜션의 실질적 소유주로 지목된 최씨는 광주시 북구 의원으로 화재 당시 주인 자격으로 손님들의 안내를 맡았다.

경찰은 특히 불이 난 바비큐장이 건축물 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점,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투숙객의 진술, 객실동 2곳이 불법 건축·개축이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인허가 과정 및 소방·위생 점검에서의 불법성을 조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의 발표와 달리 담양군은 이날 현재까지도 화재가 난 바비큐장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탓에 바비큐장 자체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단정짓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담양=정재근기자 jirg@

## 펜션·민박 등 4154곳 전남도 긴급 안전점검

전남도는 지난 15일 담양 대덕면에서 발생한 펜션 화재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오는 27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

지난 5월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전남도는 화재 등 재난 취약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1000㎡ 이하 소규모 시설은 제외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도내 펜션, 민박 등 4154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시·군, 전기·가스 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화기 비치, 소화전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윤현석기자 chadol@

## “숯불 바비큐장 실내 설치 불허해야”

전남소방본부 제도 개선 지적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담양군 펜션 화재사고와 관련, 숯불 바비큐장의 실내 설치를 불허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소방본부는 17일 담양 펜션화재 사고에서 보듯이 숯불 바비큐장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큰만큼 숯불 화덕을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숯불 바비큐장은 건축주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실내 설치 가능하다. 이는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전남소방본부는 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건축물 한 동을 기준) 숙박시설(펜션포함)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는데 연면적으로 관계 없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숙박시설 종사자에 대한 소방교육 등을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시설 내 여러 동 건축물의 합산면적이 600㎡ 이상이어도 600㎡ 이상인 건물 한 동이 없으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며 "화재가 난 펜션처럼 600㎡ 미만의 건물 3동을 운영하는 펜션은 현행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돼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 자전거 도둑 잡고보니 전과 5범

○화장실 앞에 세워둔 남의 자전거를 보고 몰래 타고 간 60대 남성이 주변에 설치된 CCTV 때문에 경찰에 들켰다.

○1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66)씨는 지난 9일 새벽 5시1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본관 앞길에서 양모(35)씨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

○경찰은 전남대병원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과 동종전과자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한 끝에 이씨를 붙잡았는데, 절도 등 전과 5범인 이씨는 경찰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은 자전거를 보니 '누군가 자전거를 가져가라'고 귀속말하는 것 같았다"고 회설 수설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 한빛타워 ----- 분양/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8층  
준공예정 : 2015년 5월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개발유)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준공예정 : 2015년 2월

- 유층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립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준공예정 : 2015년 3월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